

“내년 세계경제 3.0% 성장할 것 아시아지역 4.5%→4.1% 둔화”

KIEP·IMF, 2026 세계경제 전망
韓, 올해 0.9%→내년 1.8% 반등

“내년, 성장률 추가 하락 없이
‘완충된 둔화’ 단계로 진입해”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렀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

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항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민병주 KIAT 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기념 촬영사진을 찍고 있다. /KIAT

“피지컬 AI 핵심 인터페이스는 음성”

KIAT, 온디바이스 AI·음성 AI 포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에서 ‘생성형 AI의 또 다른 진화,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를 주제로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며, 피지컬(행동형) AI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본격 확산 속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

에 민감한 데이터 처리 시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지연 없이 실시간 분석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음성 AI는 사용자와 기기 간 소통에서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양대 장준혁 교수는 “온디바이스 AI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피지컬 AI 기반 기술이며, 피지컬 AI를 작동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는 음성이 될 것”이라며 “음성 AI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통합형 음성 언어 모델(SLM)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음성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화자의 감정과 의도까지 담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서두르세요”

기후부, 신청액 2057억 81% 소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해, 예산 2539억 원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8월 1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1701억 원, 133만 5000건의 환급이 완료된 상태.

환급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

면 4~5일 내 가능하며, 평균 2주가 소요된다. 기후부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을 계기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양광석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주요 가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행정하다 송사 휘말린 공무원에 비용지원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전담팀 운영

산업통상부가 적극 행정을 하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化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

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전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 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축산물 가격 5.4% ↑… 이달 수급 안정화

농식품부, 소비자물가 완화 방안
전년비 상승, 전월비는 4.5% 하락
비축물량 활용·축산물 할인 등 나서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 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품수’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kg 소매가격은 10월 상승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



2일 서울 소재 대형 유통매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과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세종=한용수 기자